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546
----------	-------

제안연월일 : 2018. 7.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제안자	회부일	회의정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875	김현아의원 등 10인	'17.5.15.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7.9.15.)
				소위 심사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2.20.)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5.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582	김현아의원 등 12인	'17.8.21.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7.9.15.)
				소위 심사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2.20.)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5.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8	민홍철의원 등 10인	'17.9.12.	상정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7.9.15.)
				소위 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5.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561	윤관석의원 등 12인	'17.12.4.	상정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8.5.21.)
				소위 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5.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296	신상진의원 등 12인	'18.3.6.	상정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18.5.21.)
				소위 심사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8.5.24.)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8.5.25.)는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 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 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11항).
-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광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4호).
-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제49조의2 신설).
- 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전단 중 “공정”을 “공정 및 안전”으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현장관리인은”을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을 “주택으로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을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제4호 중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을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주요구조부를”을 “주요구조부와 지붕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외벽”을 “지붕·외벽”으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위반하여”를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생략)	제24조(건축시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u>공정</u> 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u>건설기술자</u>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현장관리인</u> 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 ----- ----- <u>공정 및 안전</u> ----- ----- ----- <u>건설기술인</u> ----- ----- ----- <u>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u> -----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u>분양을</u> 목	② ----- ----- ----- ----- ----- <u>주택으로</u>

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 ⑨ (생략)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생략)

<신 설>

사용하는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⑨ (현행과 같음)

(10) -----

-----제9항까지 및 제11항
부터 제14항까지-----

⑪ (현행과 같음)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 설>

⑫ (생 략)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

1. ~ 3. (현행과 같음)

<p>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u>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u></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② (생략)</p>	<p>4. ----- ----- <u>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 ----- ----- ----- <u>--주요구조부와 지붕을-----</u> -----<u>.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u>외벽</u> 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 ----- ----- ----- ----- <u>지붕·외벽</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1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6항을 <u>위반하여</u>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u>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u>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